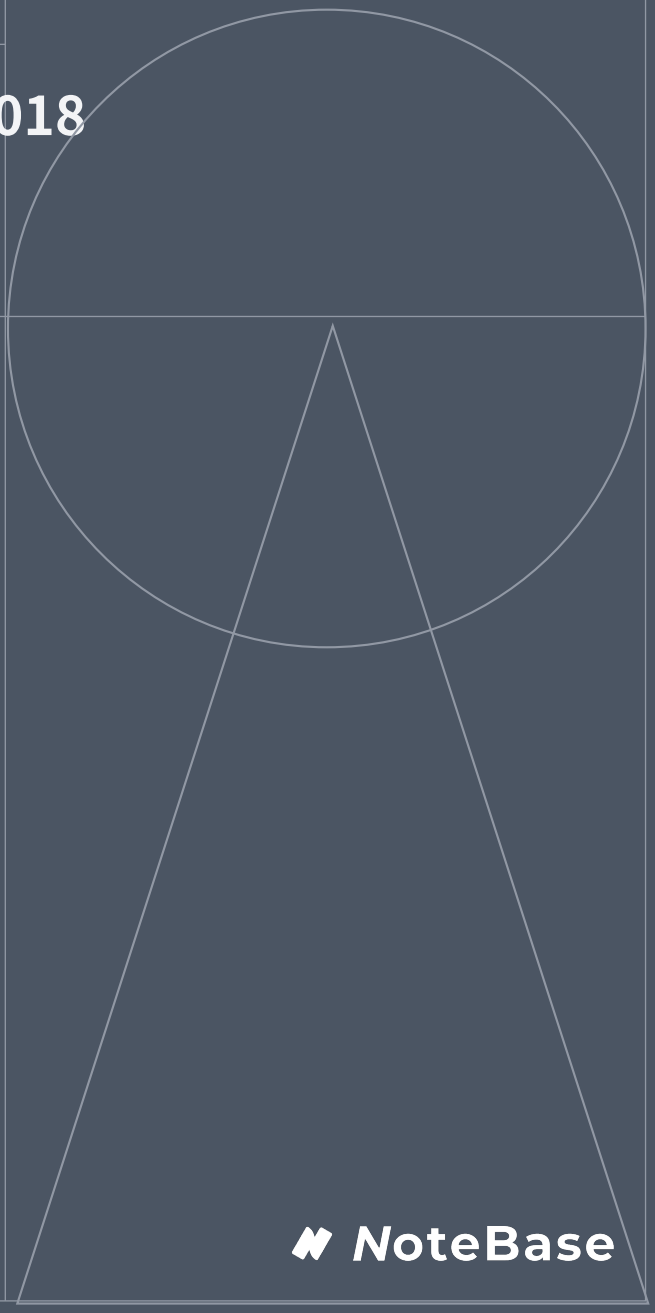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8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8

문 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③ 직접세의 예로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④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⑤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경제적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즉 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배당소득은 법인이 세후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개인 주주에게는 소득세의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소비에 부담시키는 간접세이다.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을 줄여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으나, 거래 단계의 세액 공제가 끊기는 등의 비효율도 생길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법인세는 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며,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올바르게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의 소득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부가가치세는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다.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는 이러한 역진적 부담을 완화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③ O —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 직접 부과되므로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그 부담이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간접세이다.
④ O — 소득세는 노동으로 얻는 순임금을 낮춰 노동과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므로 노동·여가 선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중립적인 조세가 아니다.
⑤ O —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자가 세 부담을 직접 인식하기 어려운 간접세이고 과세 기반도 넓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낮아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법인의 이윤에서 배당이 지급된다는 사실과 배당소득의 납세 주체를 혼동하게 만든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 단계와 납세 주체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조세의 납세 주체와 과세 대상을 먼저 연결한다. 법인세는 법인과 법인의 소득, 소득세는 개인과 개인의 소득,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연결한 뒤 직접세·간접세 및 경제적 효과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대응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붙는 간접세이다.

NoteBase

문 2. 램지원칙과 역탄력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원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② 역탄력성원칙이 램지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다.

③ 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④ 역탄력성원칙에 따르면 필수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⑤ 램지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램지원칙과 그 특수한 경우인 역탄력성원칙의 관계 및 최적 물품세율의 결정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램지원칙은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물품세를 설계하는 일반 원칙으로,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도록 세율을 정한다.
역탄력성원칙은 상품 간 수요가 독립적이라는 조건에서 램지원칙을 단순화한 특수 원칙으로,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램지원칙은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효율성 중심의 최적과세 원칙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역탄력성원칙이 램지원칙에 비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부분이다. 역탄력성원칙은 상품 간 수요가 독립적이라는 추가 조건에서 성립하는 램지원칙의 특수한 경우이고, 올바르게는 램지원칙이 더 일반적인 원칙이다.
③ O — 역탄력성원칙에서는 동일한 세수를 확보할 때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부담을 최소화한다. 즉 최적세율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대 방향으로 정해진다.
④ O — 필수재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역탄력성원칙만 적용하면 높은 세율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만을 고려한 결론이다.
⑤ O — 램지원칙의 핵심은 과세 후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세율 구조를 정하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일반 원칙과 특수 원칙의 관계를 뒤집었다. 또한 ④는 필수재에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역탄력성원칙은 분배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램지원칙을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을 같은 비율로 감소시키는 일반 원칙'으로 잡고, 상품 간 수요가 독립적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탄력성이 낮을수록 높은 세율'이라는 역탄력성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는 같은 비율의 수요 감소, 역탄력성은 낮은 탄력성에 높은 세율이며, 역탄력성원칙은 램지원칙의 특수한 경우이다.

NoteBase

문 3.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②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③ 보유세 인상의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④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⑤ 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부동산 조세를 거래세와 보유세,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보유세의 자본화 및 공급탄력성에 따른 초과부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세의 자본화는 앞으로 부담할 보유세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미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현재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낮아진다.
초과부담은 조세 때문에 거래량이나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조세수입을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다.

핵심 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이다.
보유세가 자본화되면 세후 수익 감소가 현재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므로, 예상하지 못한 세 인상의 경제적 부담은 주로 인상 당시의 소유자가 자본손실로 부담한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공급량이 조세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거래량 감소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가 아니라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틀린 표현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이며, 올바른 표현은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부과된다'이다.
② X — 미래 보유세 부담의 현재가치가 반영되면 매수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낮아져 집값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집값이 상승'이며, 올바른 표현은 '집값이 하락'이다.
③ X —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자본화로 인한 가격 하락, 즉 자본손실은 주로 인상 당시의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이후 구입자는 보유세를 내지만 낮아진 매입가격으로 이를 보상받는다. 틀린 표현은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이며, 올바른 표현은 '경제적 부담은 주로 인상 당시의 소유자가 부담'이다.
④ X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이다. 틀린 표현은 '지방세'이며, 올바른 표현은 '국세'이다.
⑤ O — 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부과되어도 공급량과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량 감소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과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본화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하고, ③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경제적 부담이 귀착되는 사람을 같다고 보게 만든다. 또한 ④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혼동하게 하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다. 자본화 문제에서는 '미래 세부담 증가 → 세후 수익 감소 → 현재 자산가격 하락'의 순서로 판단한다. 초과부담은 조세가 거래량을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유세 상승은 가격 하락으로 자본화되고, 완전비탄력적 공급에는 거래량 왜곡이 없다.

NoteBase

문 4.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③ 감면 총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된다.

④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⑤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개인소득세의 소득 개념, 과세단위, 공제 방식, 실현주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헤이그-사이먼스 소득은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를 합한 포괄적 소득 개념으로, 그 기간에 증가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낸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절세효과가 생기지만, 같은 금액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소득계층별 혜택 차이를 줄인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 늘고 과표구간이 물가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해 실질 조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과표구간 상승 또는 브래킷 크리프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헤이그-사이먼스 소득은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를 합한 것으로, 두 시점 사이에 증가한 경제적 능력의 화폐가치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② O. 2018년 출제 당시 우리나라 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정하는 개인단위 과세를 기본으로 하였다.
③ O. 감면 총규모가 같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의 높은 한계세율에서 생기는 더 큰 절세효과를 줄이므로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된다.
④ O. 2018년 출제 당시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괄적으로 매년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실현되거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실현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⑤ X. 틀린 표현은 '실질 조세부담을 낮추는'이다. 물가연동 조정이 없는 누진소득세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실질 조세부담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일반적 이미지 때문에 세부담도 낮아진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누진세에서는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명목소득 상승으로 적용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플레이션과 누진세가 함께 나오면 과표구간이 물가에 연동되는지를 먼저 본다. 연동되지 않으면 명목소득 상승으로 과표구간이 올라가 실질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면 세액공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누진세의 물가 함정은 명목소득 상승 → 과표구간 상승 → 실질 세부담 증가이다.

NoteBase

문 5. 조세의 근거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① 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

②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가 용이하다.

③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

④ 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세부담을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연결하는 이익설의 장점과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익설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보므로 시장의 교환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별 편익 측정이 어렵고 재분배·경제안정 목적의 조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익설은 편익을 부담 기준으로 삼고, 능력설은 소득·재산 등 담세능력을 부담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조세가 갖는 강제성의 특징을 반영한다'이다. 이익설은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여 교환성과 대가성을 강조하므로 조세의 강제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조세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이익설은 받은 편익에 상응하여 비용을 부담한다는 시장의 교환원리를 조세에 적용한다. 편익과 부담을 연결하면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논리가 분명해져 조세부과의 근거를 제시하기 쉽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수월하다'이다. 경기안정 정책의 편익은 개인별로 측정하여 대응시키기 어려우므로 이익설만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렵다. 올바르게는 이익설은 경제안정 목적의 재원 조달 근거로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외부성과 무관하게'이다. 외부성이 있거나 비배제적인 공공재는 개인별 편익을 측정하고 수익자에게 대가를 부과하기 어려워 이익설에 따른 재원 조달이 곤란하다. 올바르게는 편익의 귀속과 크기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이익설을 적용하기 쉽다고 해야 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가 유리하다'이다. 이익설을 그대로 적용하면 복지서비스의 편익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소득재분배 목적과 충돌한다. 올바르게는 저소득층 지원 재원은 편익보다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설이 더 잘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시장경제원리'가 핵심이다. 이익설은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가격처럼 본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이 논리를 경제안정·공공재·소득재분배까지 확대하면 개인별 편익을 측정하거나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편익에 비례한 부담', '수익자 부담', '교환원리'가 나오면 이익설의 장점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강제성, 개인별 편익 측정이 어려운 공공재, 경제안정, 소득재분배가 나오면 이익설의 한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익설은 편익의 대가이므로 시장원리에 강하고, 강제성·공공재·안정·재분배에는 약하다.

NoteBase

문 6. 비용불변의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① 비용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② 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③ 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

④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이윤은 불변이다.

⑤ 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선형 수요에 직면한 비용불변 독점기업에 종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 생산량과 이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를 $P = a - bQ$, 일정한 한계비용을 c, 종가세율을 t라 한다. 종가세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면 기업이 판매액 중 실제로 받는 몫은 $(1-t)P$이다. 따라서 세후 이윤은 $\pi = [(1-t)(a-bQ) - c]Q$로 나타난다.

사용할 공식

세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Q_0 = \frac{a-c}{2b}, \qquad P_0 = \frac{a+c}{2}$

$Q_1 = \frac{a-c/(1-t)}{2b}, \qquad P_1 = \frac{a+c/(1-t)}{2}$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독점기업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하며, 종가세가 판매수입의 한계가치를 $1-t$배로 낮추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소비자가격 상승분은 $P_1 - P_0 = tc/[2(1-t)] > 0$이다. 반면 생산자의 세후 단위당 수취액은 $(1-t)P_1 = [(1-t)a + c]/2 < P_0$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고 생산자는 더 낮은 세후 가격을 받으므로 종가세 부담을 양쪽이 나누어 진다. 또한 $Q_1 < Q_0$이므로 소비자잉여와 독점이윤은 모두 감소한다. 단위당 세액은 tP_1이고 $tP_1 - (P_1 - P_0) = ta/2 > 0$이므로 가격상승분은 단위당 세액보다 작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비용불변은 한계비용 c가 생산량과 무관하다는 뜻이지 소비자가격이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종가세 부과 후 소비자가격은 P_0에서 P_1로 상승한다. 틀린 표현 '소비자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은 하락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종가세 부담을 분담한다.
③ X.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소비자잉여도 감소한다. 틀린 표현 '소비자잉여는 불변이다'는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종가세는 기업의 세후 한계수입을 낮추고 최적 생산량과 이윤을 감소시킨다. 틀린 표현 '독점이윤은 불변이다'는 '독점이윤은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소비자가격 상승분은 단위당 세액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일 뿐이며 나머지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틀린 표현 '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는 '가격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작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비용불변'을 '가격불변'으로 바꾸어 읽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비용불변은 생산량이 변해도 단위비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다. 또한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와 ⑤도 옳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가세가 부과되면 먼저 기업의 판매수입을 $(1-t)P$로 바꾸어 이윤극대화 조건을 세운다. 그다음 소비자가격의 상승과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 하락을 각각 확인하면 조세 부담의 분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용불변 독점의 종가세 효과는 '소비자가격 상승, 세후 수취가격 하락, 생산량·소비자잉여·이윤 감소'이다.

NoteBase

문 7. 피구세(Pigouvian tax) 형태의 공해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② 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③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④ 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⑤ 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피구세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할 때 한계비용, 가격, 생산량, 오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구세는 오염처럼 제3자에게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세금으로 부담시켜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에 가깝게 만드는 교정세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므로, 피구세는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제품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과 오염량을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을 인하'이다. 공해세는 생산자가 오염의 외부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해당 제품의 사적 한계비용을 인상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격은 하락'이다. 세금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되며, 공해세는 그 과대한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해가 완전히 제거'이다. 적정한 공해세의 목적은 오염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며,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생산과 이에 수반되는 일부 오염은 남을 수 있다.
⑤ O — 탄소세는 탄소 배출이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외부비용을 배출 주체에게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피구세이다.

오답 포인트

피구세의 목표를 '공해의 완전 제거'로 오해하거나, 세금 부과 뒤 가격과 생산량의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핵심은 오염 재화의 시장생산량이 원래 과다하므로 세금이 비용과 가격은 높이고 생산량과 오염량은 낮춘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세가 나오면 '외부비용의 내부화 → 사적 한계비용 상승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생산량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오염량은 0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감소한다.

암기 포인트

피구세는 비용·가격은 올리고, 과다 생산·오염은 줄인다. 탄소세가 대표적이다.

NoteBase

문 8.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가 아닌 것은?

①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②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③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④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⑤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세제개편이 경기 변동에 따라 조세·이전지출을 자동으로 변화시켜 가처분소득과 총수요의 변동을 줄이는 장치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경기 변동 때마다 별도의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윤이 변하면 누진적 소득세·법인세 부담이나 소득연계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여 경기를 완충하는 제도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가 세율·세액 또는 지출을 새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세제개편 자체는 재량적 결정이지만, 개편 뒤 소득이나 이윤에 연동되는 세율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담배 소비세 인상은 담배 소비에 부과되는 세부담을 정책적으로 높인 것으로, 소득이나 이윤의 증감에 따라 세부담이 자동 조절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동안정화장치로 분류한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재량적 세제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아닌 것'이다.
② O —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넓히면 더 많은 고소득 과세표준에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늘 때 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고 소득이 줄 때 세부담도 더 크게 감소하므로 누진적 소득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화된다.
③ O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과 가구요건에 연계하여 지급되는 이전지출이다. 지급 확대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보완하므로 소득연계 이전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④ O —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높이면 기업 이윤이 클 때 세부담이 더 커지고 이윤이 감소할 때 세부담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이윤에 연동되는 법인세의 경기완충 기능이 강화된다.
⑤ O —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면 그 구간을 넘는 소득에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커진다. 소득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폭이 커져 누진적 소득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화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세금 인상을 자동안정화장치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①은 담배라는 특정 재화의 소비에 대한 세율을 재량적으로 높인 조치인 반면, ②·④·⑤는 소득이나 이윤에 연동되는 세율구조를 강화하고 ③은 소득연계 이전지출을 확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 당국의 추가 결정 없이 경기와 함께 변하는 소득·이윤을 과세표준이나 지급기준으로 삼아 세부담 또는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는지 확인한다. 누진소득세·법인세·소득연계 이전지출이면 자동안정화 기능을, 특정 재화의 세율을 한 번 올리는 조치이면 재량적 정책을 우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이윤 연동은 자동 안정, 특정 물품의 세율 인상은 재량 조치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내용의 일부이다. 현대의 조세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봉급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또한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과세 부담으로 되는 경우이다.
ㄴ. 조세가 국민들의 근면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ㄷ.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 기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가 그들을 종종 몰락시키고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ㄹ. 국민들에게 조세 징수인의 빈번한 방문 · 짜증나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 · 번거로움 · 억압을 주는 경우이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민간의 선택을 바꾸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초과부담과 징세비용·납세협력비용 등 다른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원배분의 왜곡은 조세가 노동·저축·생산·소비 등의 유인을 바꾸어 조세가 없을 때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현상이며, 그로 인한 조세수입 이외의 후생손실을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ㄱ은 조세행정에 인력과 봉급이 드는 징세비용, ㄴ은 근면과 산업 종사의 유인을 낮추는 자원배분 왜곡, ㄷ은 탈세에 대한 몰수·형벌이 초래하는 손실, ㄹ은 세무조사와 접촉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시간·불편 등의 납세협력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원배분 왜곡과 직접 관련된 것은 ㄴ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ㄴ은 조세가 근면과 특정 산업 종사의 유인을 약화하여 노동과 생산의 선택을 바꾸는 경우이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에 해당한다.
② X — ㄹ만을 고른 부분이 틀렸다. ㄹ의 빈번한 방문·조사는 납세자의 불편과 시간 부담이라는 납세협력비용에 해당하며, 자원배분 왜곡에 해당하는 것은 ㄴ이다.
③ X — ㄱ과 ㄹ을 자원배분 왜곡으로 묶은 부분이 틀렸다. ㄱ은 조세를 거두는 데 드는 징세비용이고 ㄹ은 납세협력비용이므로, 올바른 항목은 ㄴ뿐이다.
④ X — ㄷ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ㄴ은 자원배분 왜곡이지만 ㄷ은 탈세자에 대한 몰수·형벌로 개인이 몰락하고 자본 운용의 이익이 사라지는 손실을 말한다. 따라서 ㄷ을 제외하고 ㄴ만 골라야 한다.
⑤ X — ㄹ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ㄴ은 자원배분 왜곡이지만 ㄹ은 징수인의 방문과 조사로 생기는 불편·번거로움이라는 납세협력비용이다. 따라서 ㄹ을 제외하고 ㄴ만 골라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ㄷ·ㄹ도 모두 조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손실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회적 비용이 자원배분의 왜곡은 아니다. 특히 ㄷ의 '자본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상실한다'는 표현만 보고 초과부담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문장의 직접 원인은 생산 유인의 변화가 아니라 탈세 실패에 대한 몰수·형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 때문에 노동·저축·생산·소비의 유인이 변하여 경제주체가 활동을 줄이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 자원배분 왜곡으로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의 봉급은 징세비용, 신고·조사에 드는 시간과 불편은 납세협력비용, 탈세 적발에 따른 제재의 손실은 별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유인이 바뀌면 왜곡, 거두는 데 들면 징세비용, 응하는 데 들면 납세협력비용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② 세무감사의 확률을 높이면 탈세는 감소한다.

③ 임금소득에 비해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④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⑤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증가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탈세의 유인에 영향을 주는 벌금률·세무감사 확률·세율과,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귀속소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탈세는 과세·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이다.
벌금률과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지면 적발될 때의 기대비용이 커져 탈세 유인이 줄어든다.
귀속소득은 자가주택 거주나 가사노동처럼 시장거래 없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나 노동에서 얻는 경제적 편익이다. 이러한 귀속소득은 통상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탈세에 대한 벌금률이 높아지면 적발 시 부담하는 금액과 탈세의 기대비용이 커지므로 탈세가 감소한다.
② O —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지면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탈세의 기대편익이 줄어든다.
③ O — 임금소득은 고용주의 지급명세 등 제3자 정보로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쉽지만, 자영업 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파악·신고하는 부분이 커서 소득 누락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의 탈세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④ X — 틀린 표현은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이다. 귀속소득은 통상 과세·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미보고 자체가 탈세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과세·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탈세가 된다'이다.
⑤ O — 세율이 오르면 소득을 신고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커져 신고소득보다 탈루소득을 선택하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탈루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세율 인상의 전체 효과는 소득효과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이 선지는 대체효과만을 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경제적 의미의 소득과 법적으로 과세·신고할 소득을 동일하게 보는 함정이다. 귀속소득은 경제적 편익이지만 통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를 곧바로 탈세라고 할 수 없다. ⑤는 세율 인상의 전체 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의 방향만 묻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소득에 법적 과세·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의무가 있는 소득을 숨기면 탈세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귀속소득의 미보고는 탈세가 아니다. 탈세 모형에서는 적발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기대비용을 높여 탈세를 줄이고,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사·벌금 상승 → 탈세 감소,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 → 탈루소득 증가, 비과세 귀속소득의 미보고 → 탈세 아님이다.

NoteBase

문 11. A재의 한계비용은 100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200 - 2Q_a$이다. A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비효율성 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Q_a: A재의 수량)

① 0.115
② 0.125
③ 0.135
④ 0.145
⑤ 0.2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상수요곡선으로 조세 부과 전후의 거래량을 구한 뒤,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누어 비효율성 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비용은 100으로 일정하다.
보상수요곡선은 $P = 200 - 2Q_a$이다.
공급자에게 부과한 단위당 조세는 20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100에서 120으로 상승한다.
비효율성 계수는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사용할 공식

조세 부과 전 거래량: $100 = 200 - 2Q_0$
조세 부과 후 거래량: $120 = 200 - 2Q_1$
초과부담: $DWL = \frac{1}{2} \times t \times (Q_0 - Q_1)$
조세수입: $T = tQ_1$
비효율성 계수: $\frac{DWL}{T}$

보상수요곡선 아래에서 단위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켜 생기는 후생손실은 삼각형의 면적이고, 조세수입은 단위세와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조세 부과 전에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으므로 $100 = 200 - 2Q_0$에서 $Q_0 = 50$이다.
2. 단위당 20의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은 120이므로 $120 = 200 - 2Q_1$에서 $Q_1 = 40$이다.
3. 거래량 감소분은 $50 - 40 = 10$이고, 초과부담은 $\frac{1}{2} \times 20 \times 10 = 100$이다.
4. 조세수입은 $20 \times 40 = 800$이다.
5. 비효율성 계수는 $\frac{100}{800} = 0.125$이다.

선지 판단

① X — 0.115는 계산값 0.125와 다르다. 틀린 수치 0.115는 0.125로 고쳐야 한다.
② O — 초과부담 100을 조세수입 800으로 나누면 0.125이므로 옳다.
③ X — 0.135는 계산값 0.125와 다르다. 틀린 수치 0.135는 0.125로 고쳐야 한다.
④ X — 0.145는 계산값 0.125와 다르다. 틀린 수치 0.145는 0.125로 고쳐야 한다.
⑤ X — 0.250은 계산값 0.125와 다르다. 틀린 수치 0.250은 0.125로 고쳐야 한다. 0.250은 초과부담의 삼각형 면적에서 $\frac{1}{2}$을 빠뜨리면 나오는 값이다.

오답 포인트

비효율성 계수의 분모는 조세 부과 전 총지출이나 조세율이 아니라 조세수입이다. 또한 초과부담은 사각형이 아니라 거래량 감소로 생긴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frac{1}{2}$을 반드시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세 부과 전후의 거래량을 각각 구하고, 거래량 감소분으로 초과부담을 계산한 다음, 이를 과세 후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조세수입으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비효율성 계수는 '초과부담 ÷ 조세수입'이며, 선형 수요에서 초과부담은 조세 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NoteBase

문 1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완전통합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ㄴ.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완전통합으로 법인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ㄷ. 배당세액공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완전통합 방식과 부분통합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합방식: 법인을 독립된 과세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소득 전부를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는 완전통합 방식이다.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
자본이득방식: 배당된 이윤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사내유보된 이윤은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완전통합 방식이다.
배당세액공제도: 법인세를 먼저 과세한 뒤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에 가산하고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부분통합 방식이다.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세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차등세율제도: 법인 단계에서 배당분에 사내유보분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배당분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부분통합 방식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ㄹ은 옳지만, 완전통합 방식인 자본이득방식을 정확히 설명한 ㄴ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 'ㄱ,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의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며, 사내유보분에 대한 법인세까지 전부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옳은 ㄱ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ㄴ, ㄷ'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의 조합방식, ㄴ의 자본이득방식, ㄹ의 차등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고, 잘못된 ㄷ은 제외되어 있다.
④ X — 옳지 않은 ㄷ이 포함되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ㄷ의 '법인세 과세분 전체'는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로 고쳐야 하며, 조합 'ㄴ, ㄷ,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이 옳지 않으므로 네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리다. ㄷ의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는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고쳐야 하며,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 '전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배당세액공제도는 배당된 이윤에 대응하는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사내유보분을 포함한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주주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인소득 전부를 주주 단계로 귀속시키면 완전통합,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배당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면 부분통합으로 구분한다. 그다음 배당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이 '법인세 전체'라고 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통합은 조합·자본이득, 부분통합은 배당세액공제·차등세율이다. 배당세액공제의 핵심은 법인세 전체가 아니라 배당 대응분이다.

NoteBase

문 13.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할 때 여가와 노동공급에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근로소득세로 세후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관계없이 이 방향은 같다.
소득효과: 세후소득 감소로 실질소득이 낮아진 데 따른 효과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가 감소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단정할 수 없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올바르게는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② O —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하락에 따른 소득효과로 여가가 줄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반면 세후임금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로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이 감소하므로, 어느 효과가 더 큰지 주어지지 않으면 총노동공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③ X —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가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올바르게는 총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총변화를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⑤ X —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총변화를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에 따라 여가가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근로소득세 부과를 단순한 소득 감소로만 보고 소득효과만 판단하거나, 세후임금 하락의 대체효과 방향을 반대로 잡기 쉽다. 특히 ③은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 감소가 여가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놓치게 하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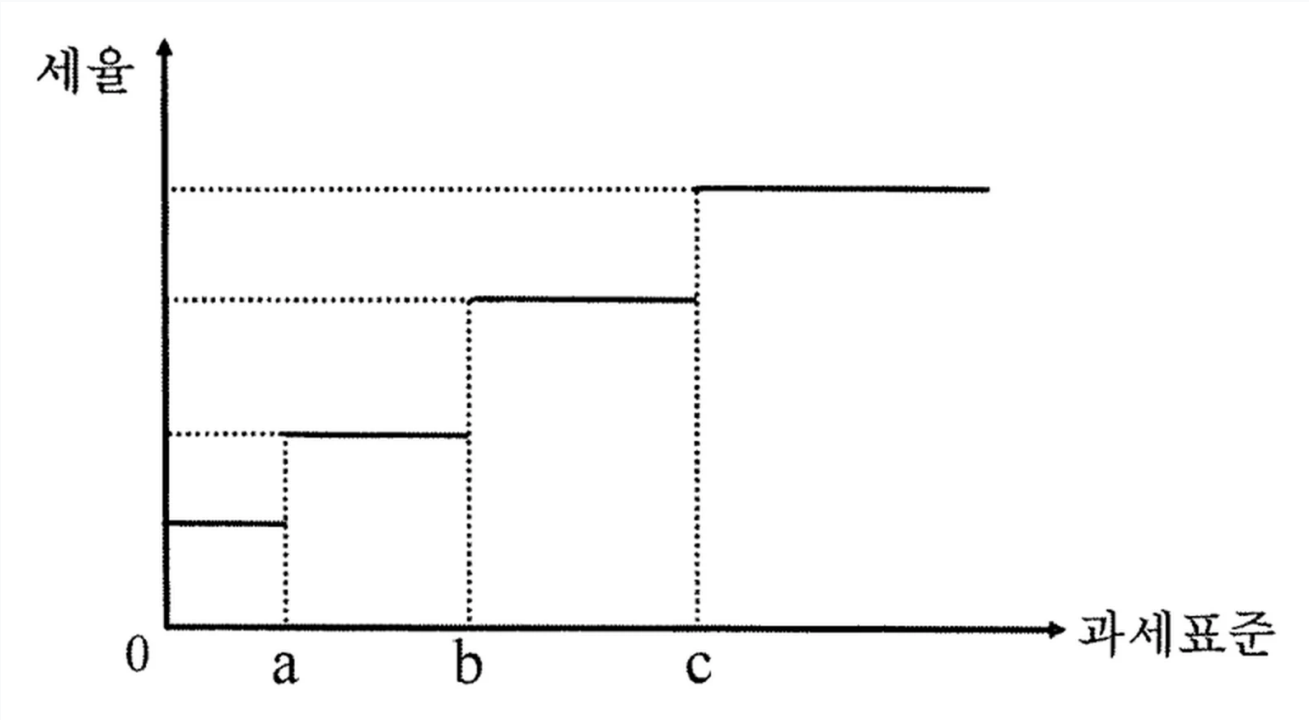
먼저 세후임금 하락은 대체효과를 통해 언제나 여가 증가·노동공급 감소를 가져온다고 판단한다. 그다음 소득 감소에 대해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 감소·노동공급 증가, 열등재이면 여가 증가·노동공급 감소로 구분하여 두 효과를 합친다.

암기 포인트

임금세의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와 충돌하여 불확정이고,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어서 노동 감소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그림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

②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③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 걸쳐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④ 과세표준이 c를 초과하면 평균세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⑤ 과세표준의 전 구간에서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계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세율표에서 평균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세율, 가로축은 과세표준임을 확인한다.
2. 굵은 수평선은 각 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며, 경계점 a, b, c를 지날 때마다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3. 평균세율은 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므로, 그래프의 계단 모양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선지와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0에서 a까지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므로 평균세율도 그 한계세율과 같다. 과세표준이 a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평균세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므로 누진성이 나타난다. 이후 한계세율이 일정한 구간에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 앞 구간의 세액이 총세액에 포함되어 있어 평균세율은 계단식으로 뛰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그래프의 첫 경계점은 a이다. 0에서 a까지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일정하지만, a 초과분부터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평균세율이 높아지므로 누진세가 나타난다.
② X — 그래프에서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것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이다. 올바르게는 평균세율은 각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계점에서도 계단식으로 뛰지 않는다.
③ X — 그래프의 0에서 a까지는 하나의 한계세율만 적용되므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다. 올바르게는 a를 초과한 뒤에는 평균세율이 해당 구간의 한계세율보다 낮지만, 전 구간에서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
④ X — c 초과 구간에서는 한계세율이 일정하지만, 과세표준이 늘수록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비중이 커져 평균세율은 계속 상승한다. 올바르게는 평균세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에 점차 가까워진다.
⑤ X — 그래프의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세액의 비율이다. 일정액의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총세액과 평균세율은 낮아지지만 세율표의 기울기인 한계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일정액 세액공제의 증가는 평균세율을 낮추고 한계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그림의 계단선을 평균세율로 오인하게 만들고, ④는 최고 한계세율이 일정해진다는 사실을 평균세율도 일정해진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③에서는 첫 구간에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표의 계단선은 먼저 한계세율로 읽는다. 한계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바뀌면 평균세율은 그 지점에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상승하며, 첫 단일세율 구간에서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다.

암기 포인트

한계세율은 계단식, 평균세율은 완만한 상승이다. 첫 구간에서는 둘이 같고, 이후에는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다.

NoteBase

문 15.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①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④ 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⑤ 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가에 직접 과세하기 어려울 때 재화와 여가·노동의 보완관계를 이용한 개별소비세의 효율성과 정액세의 효율성·형평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여가는 보통 직접 과세할 수 없으므로, 여가와 보완관계인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통해 노동과 소비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콜렛-헤이그 원칙의 핵심이다.
정액세는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세액이 변하지 않아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형평성까지 우월한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X재는 여가와 보완재이므로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의 소비뿐 아니라 함께 소비되는 여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O — Y재는 노동과 보완재이므로 Y재에 대한 과세는 Y재 소비와 노동의 유인을 변화시키고,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여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 O — 일반소비세·소득세·개별소비세의 상대적 효율성은 재화와 여가의 보완·대체관계, 세율 구조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만으로 어느 조세가 항상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O — X재는 여가와 보완재이므로 X재에 중과하면 직접 과세하기 어려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생긴다. 여가와 보완성이 큰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정액세가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성에 관한 장점이다. 실제로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부담 능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이 자동으로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초과부담이 없다'는 효율성의 장점을 '형평성이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바꾼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다. 또한 ②는 Y재가 여가의 직접 보완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보기 쉽지만, Y재 과세가 노동 선택을 바꾸면 노동과 대체되는 여가 선택도 함께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 대상 재화가 여가와 보완재인지 노동과 보완재인지 확인한다. 여가와 보완재이면 그 재화에 대한 중과가 여가를 간접 과세하는 효과를 낸다. 이어 '초과부담 없음'은 효율성 판단이고, '부담 능력에 맞는가'는 형평성 판단이라는 점을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여가의 보완재에는 중과, 정액세의 무왜곡은 효율성이지 형평성 보장이 아니다.

NoteBase

문 16.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②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④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⑤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소득세가 세후이자율과 현재·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꿀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저축의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므로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한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미래소비를 줄이고 현재소비를 늘린다. 한편 세후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는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소비에 대한 두 효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미래소비에 대한 두 효과는 같은 방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저축은 이자소득세 수입만큼 증가하는 방향이지만 민간저축의 변화는 확정되지 않는다. 민간저축의 변동 폭과 정부저축의 증가 폭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두 저축의 합인 국민저축의 변화도 단정할 수 없다.
② O — 이자소득세는 세후이자율을 낮춘다. 현재소비를 포기하여 얻는 미래소비가 줄어들므로 현재소비를 기준으로 한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③ O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로 증가하지만 소득효과로 감소하므로 총효과를 알 수 없다. 민간저축은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것이므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④ O —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한다. 반면 세후이자소득 감소로 실질소득이 줄면 정상재인 현재소비는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이다. 미래소비는 대체효과로 감소하고,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로도 감소하므로 두 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현재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반대이지만, 미래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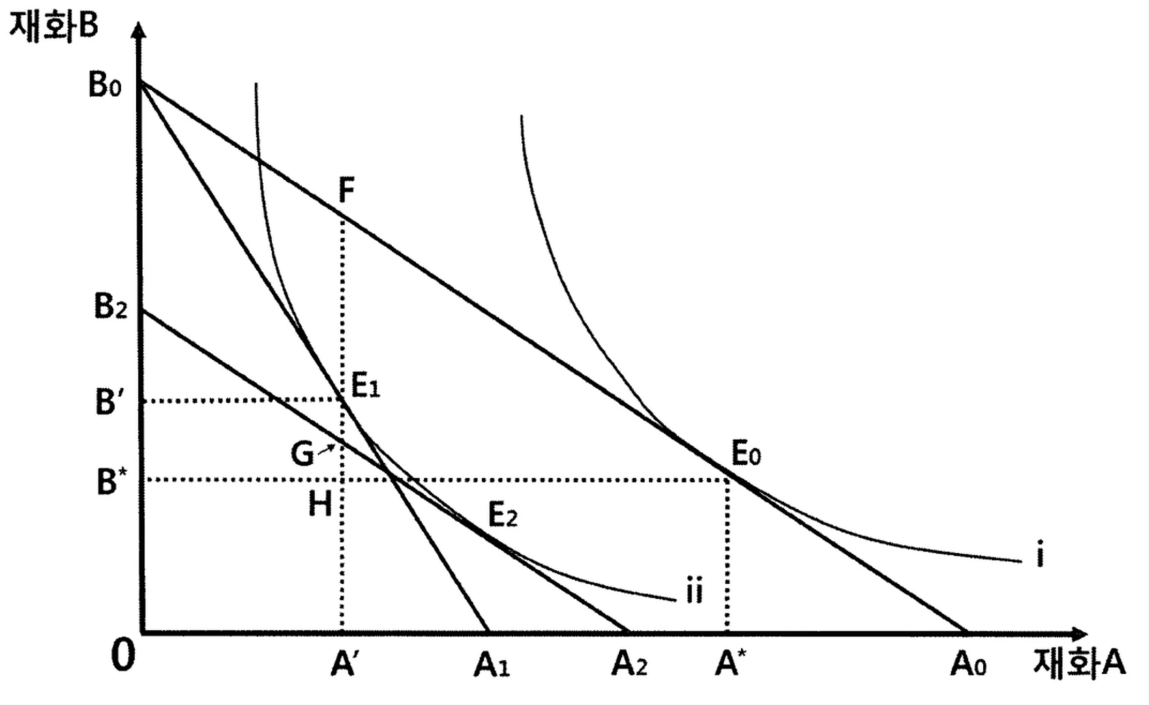
먼저 이자소득세가 세후이자율을 낮춰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는 점을 잡는다. 그다음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증가·미래소비 감소,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소득세: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미래소비는 둘 다 감소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overline{B_0A_0}$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overline{B_0A_1}$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_0, E_1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overline{B_2A_2}$로 주어져 있다. 이때 초과부담은?



① $\overline{FE_1}$

② $\overline{FG}$

③ $\overline{FH}$

④ $\overline{E_1G}$

⑤ $\overline{E_1H}$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총효용손실의 화폐가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을 뺀 순수한 후생손실이다. 도형에서는 총부담인 $\overline{FG}$에서 세수인 $\overline{FE_1}$을 뺀 $\overline{E_1G}$로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overline{FE_1}$은 과세 후 재화 A의 소비량에서 종량세로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의 화폐가치이다.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조세수입이다.

② X

$\overline{FG}$은 과세 후 효용수준을 과세 전 가격으로 달성하게 하는 예산선 $\overline{B_2A_2}$와 과세 전 예산선 $\overline{B_0A_0}$ 사이의 거리로, 과세에 따른 총효용손실의 화폐가치이다.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총부담 또는 등가변화이다.

③ X

$\overline{FH}$은 과세 전 예산선 위의 F와 과세 전 선택점 E_0의 재화 B 소비량을 나타내는 수평선 위의 H 사이 거리일 뿐이다. 총효용손실과 세수의 차이가 아니므로 초과부담이 아니며, 올바른 초과부담은 $\overline{E_1G}$이다.

④ O

총부담은 $\overline{FG}$, 조세수입은 $\overline{FE_1}$이므로 초과부담은 $\overline{FG} - \overline{FE_1} = \overline{E_1G}$이다.

⑤ X

$\overline{E_1H}$은 과세 후 선택점 E_1과 과세 전 선택점 E_0의 재화 B 소비량을 표시한 수평선 사이의 거리로, 총부담에서 세수를 뺀 구간이 아니다.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overline{E_1G}$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 때문에 줄어든 구매력 전체를 초과부담으로 보면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overline{FG}$에는 정부로 이전되는 세수 $\overline{FE_1}$도 포함된다. 사회 전체에서 사라지는 후생은 그 나머지인 $\overline{E_1G}$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 후 효용수준에 접하면서 과세 전 예산선과 평행한 보상예산선을 찾는다. 원래 예산선과 보상예산선의 간격이 총부담이고, 원래 예산선과 과세 후 예산선의 간격이 세수이다. 두 간격의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암기 포인트

초과부담 = 총효용손실의 화폐가치 - 조세수입 = $\overline{FG} - \overline{FE_1} = \overline{E_1G}$이다.

NoteBase

문 18.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② 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개인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가 조세감면의 목표라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 세액공제 사례로 의료비, 정치후원금 등이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과세표준, 실제 세 부담, 경제행위의 상대가격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누진세율 아래에서 소득공제의 감세효과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금액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소득공제 =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소득공제의 감세액은 대체로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이므로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같은 공제액이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의 혜택이 커진다. 반면 같은 공제요건과 공제액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같은 금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세액이 더 커지지 않는다. 2018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식 작성방법에서도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정치자금기부금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효과가 커지는 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다. 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공제 가능한 세액이 충분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세효과가 소득수준에 따라 커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올바른 표현: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 감면 효과가 대상자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② O
소득공제는 인적 사정이나 일정 지출 등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맞게 과세하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③ O
특정 경제행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다른 개인들에게 서로 다른 보조율, 즉 서로 다른 실효가격을 만든다. 그 결과 동일한 재화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개인 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레토 효율성의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④ O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경제행위의 실효가격을 서로 다르게 낮춘다. 개인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를 때 이러한 차등적 유인이 목표 행위를 더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특정 경제행위의 장려라는 목적에서는 소득공제가 일률적인 세액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⑤ O
2018년 당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었고, 정치자금기부금도 일정 요건과 한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이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사례로 든 것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보고 모든 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데 있다. 누진세율과 직접 연결되어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며,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제가 적용되는 위치를 먼저 구분한다. 과세표준에서 빼면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 부담이 줄고, 산출세액에서 빼면 세액공제이므로 정해진 공제액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정 행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람마다 한계세율이 달라 실효가격도 달라진다는 점까지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으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NoteBase

문 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①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② 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하버거의 2부문·2요소 일반균형 모형에서 조세가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자본 보수와 노동 보수의 상대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출효과는 조세로 해당 부문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그 부문이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요소의 상대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이다. 요소대체효과는 특정 요소에 대한 과세로 그 요소의 사용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효과이다. X는 자본집약적이고 Y는 노동집약적이므로 X의 생산 위축은 자본의 상대보수를 낮추고, Y의 생산 위축은 노동의 상대보수를 낮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두 부문의 노동에 같은 세율로 과세하면 특정 부문만의 산출구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요소 전반에 대한 일반세가 된다. 노동 총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 부담은 노동의 순보수 하락으로 귀착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이다. X재 물품세는 생산자가 받는 X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자본집약적인 X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므로 자본의 상대수요와 상대보수를 낮춘다. 올바르게는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이다.
③ O — X부문의 자본 과세로 X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자본집약적인 X의 산출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상대수요가 줄어 산출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④ O — X부문의 자본 과세는 X기업이 자본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자본 수요 감소와 노동 수요 증가로 요소대체효과 역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⑤ O — Y부문의 노동 과세는 노동집약적인 Y의 산출을 줄여 노동의 상대수요를 낮추고, Y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게 한다. 두 효과 모두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 즉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X재 가격의 상승과 생산자가 받는 세후 상대가격의 하락을 혼동하기 쉽다. 요소가격 귀착은 생산 측의 반응으로 판단하므로 자본집약적 X의 생산이 위축되고 자본의 상대보수가 하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로 어느 부문의 산출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그 부문이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요소의 상대보수가 하락한다고 판단한다. 특정 요소세라면 이어서 과세 요소에서 비과세 요소로 대체되는 방향을 확인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 순서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집약적 X 위축 → 자본 상대보수 하락, 노동집약적 Y 위축 → 노동 상대보수 하락이다.

NoteBase

문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의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여러 세율로 구성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④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⑤ 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은 법인세율을 낮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가 생산, 소득의 이중과세, 세율 구조, 자금조달 방식, 국제 조세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적 이윤 과세: 모든 명시적·암묵적 비용과 정상수익을 뺀 초과이윤에 과세하므로 한계적인 생산·투자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 과세이다.
이중과세: 법인이 번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상이다.
부채편향: 타인자본의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하지만 자기자본의 보통수익은 공제하지 않으면 부채 조달의 세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조세경쟁: 이동성이 높은 자본을 유치하려고 국가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적 이윤만 과세하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관계가 바뀌지 않으므로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② O. 법인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배당될 때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③ O.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가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누진구조였다.
④ X. 틀린 부분은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이다. 타인자본의 이자비용만 공제하면 부채 조달이 자기자본 조달보다 세제상 유리해져 기업이 부채를 과도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온다'이다.
⑤ O. 국가 간 조세경쟁에서는 이동 가능한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출 유인이 생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이자비용 공제'만 보고 투자 촉진 효과로 판단하기 쉽다. 핵심은 공제가 타인자본에만 허용된다는 비대칭성이다. 이 비대칭성은 부채의 상대적 비용을 낮추므로 자금조달 선택을 왜곡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의 왜곡 여부는 세금이 선택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는지로 판단한다. 초과이윤만 과세하면 한계조건이 변하지 않지만, 이자는 공제하고 자기자본수익은 공제하지 않으면 부채와 자기자본의 상대비용이 달라져 조달 방식이 왜곡된다.

암기 포인트

경제적 이윤 과세는 생산 중립, 이자만 공제하면 부채편향, 국제 조세경쟁은 법인세율 인하 압력이다.

NoteBase

문 2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② 내부수익률은 사업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③ 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④ 추가적인 비용을 비용 증가 또는 편익 감소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⑤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이 사업의 현재가치와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의 차이, 편익-비용 비율의 계산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재가치법: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여 현재 시점의 순편익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금액이 더 크게 할인된다.
내부수익률: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률이라는 비율로 평가하므로 사업 규모가 다른 경우 현재가치법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편익-비용 비율: 할인된 총편익을 할인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같은 항목을 비용 증가로 처리하는지 편익 감소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분모 또는 분자가 달라지므로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의 편익은 더 크게 할인된다. 따라서 편익이 초기에 집중된 사업은 편익이 후기에 집중된 사업보다 현재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잃어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② O.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 즉 순현재가치가 $NPV =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③ O. 내부수익률법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률을 비교하지만, 현재가치법은 순편익의 절대액을 비교한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현저히 다르면 두 방법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이다. 추가적인 불리한 항목을 비용 증가로 분류하면 비용인 분모가 커지고, 편익 감소로 분류하면 편익인 분자가 작아진다. 순편익 $B - C$는 같더라도 편익-비용 비율 B/C은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이다.
⑤ O.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에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을 같은 성질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비용 증가와 편익 감소는 순편익에는 같은 영향을 주지만, 하나는 비율의 분모를 바꾸고 다른 하나는 분자를 바꾸므로 편익-비용 비율에는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율 문제에서는 현금 흐름의 시점을, 평가기준 문제에서는 절대액인지 비율인지, 편익-비용 비율 문제에서는 해당 항목이 분자와 분모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율 상승은 초기 편익에 유리하고, 내부수익률은 비율·순현재가치는 절대액이며, 순편익이 같아도 분류 방식에 따라 B/C는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문 22.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

④ 연금제도가 가지는 재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부과방식의 연금이 운용되게 되면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차이, 연금이 민간저축과 세대 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장래 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같은 시기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같은 시기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으므로 순수한 부과방식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연금은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노후의 소득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O — 민간 연금보험에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의무가입은 위험집단을 넓혀 이러한 시장실패를 완화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는 적립방식의 요소를 가진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순수 부과방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④ O — 재산대체효과는 장래 받을 연금급여를 개인이 보유한 재산처럼 인식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민간저축을 줄이는 효과이다.
⑤ O — 부과방식에서는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 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과 '도입 당시의 재정방식'을 혼동하기 쉽다. ③은 현재 또는 장래의 성격이 아니라 1988년 도입 방식을 묻는 표현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를 미리 쌓아 장래 급여에 쓰면 적립방식,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과방식으로 판단한다. 연금이 개인의 노후자산을 대신하면 민간저축은 감소하고, 부과방식이면 세대 간 이전이 나타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적립은 '내고 쌓아 나중에 지급', 부과는 '현재 세대가 현재 노인을 부양'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적립기금을 두고 출발하였다.

NoteBase

문 23.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②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③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④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⑤ 야생동물을 포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야생동물 남획이라는 부정적 외부성을 규제, 거래 가능한 포획권, 재산권 설정, 피구 조세로 내부화하는 원리와 코즈 정리의 결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성의 내부화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반영하도록 유인을 바꾸는 것이다. 직접규제는 행위나 수량을 명령·통제하고, 거래 가능한 포획권은 총량을 정한 뒤 권리를 거래하게 하며, 피구 조세는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한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최초의 재산권 귀속은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주지만 협상으로 달성되는 효율적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순찰·감시라는 규제를 시행했는데도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감시 비용, 집행의 어려움 등 직접규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는다'이다. 코즈 정리의 전제인 명확한 재산권과 거래비용 부재 아래에서는 최초의 재산권 귀속이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주지만 효율적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 정부가 총포획량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거래하게 하는 것은 거래 가능한 허가제이다. 가격기구를 이용해 희소성과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외부성 내부화이다.
④ O — 지역 부족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면 야생동물을 보전해 탐방수입을 얻을 유인이 생긴다. 이는 불명확했던 재산권을 확립하여 남획 유인을 줄인 사례이다.
⑤ O — 포획·반출이라는 외부비용 유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 남획을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까지 줄였다면, 사적 비용에 외부비용을 반영한 피구 조세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재산권의 최초 귀속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섞은 선지이다. 코즈 정리의 표준 전제에서는 '누가 권리를 처음 받는가'는 분배를 바꾸지만 효율적인 최종 배분은 바꾸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수단의 작동 경로를 확인한다. 수량·행위를 직접 통제하면 규제, 총량을 정하고 권리를 거래하면 거래 가능한 허가제, 외부비용 유발 행위에 세금을 매기면 피구 조세, 명확한 재산권 아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하면 코즈 방식이다. 코즈 정리에서는 최초 권리 귀속의 분배 효과와 효율성 효과를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의 표준 결론은 '최초 권리 귀속은 분배에는 영향, 효율에는 무관'이다.

NoteBase

문 24. 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의 접근이다.

② 개인 간의 직접적 효용비교 없이 어떤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를 감안하지 않지만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

④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칼도기준을 충족한다.

⑤ 사회구성원들이 1원에 대해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상원칙이 파레토 기준을 잠재적 보상 가능성으로 확장한 기준이라는 점과 실제 보상의 필요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상원칙은 정책 변화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실을 입는 사람에게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변화를 잠재적 개선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판단한다. 칼도 기준은 기존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동할 때 이득자의 최대 지불의사가 손실자의 최소 보상요구액보다 큰지를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파레토 기준은 누군가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개선으로 판정하지 못한다. 보상원칙은 이득자가 손실자를 잠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를 보아 이 한계를 보완한다.
② O — 보상원칙은 개인들의 효용 자체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이득자의 지불의사와 손실자의 보상요구액을 화폐액으로 비교하여 변화를 평가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선택 결정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이다. 보상원칙은 실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득자가 손실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잠재적 보상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④ O — 새로운 상태의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이득이 남는다면 기존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는 칼도 기준을 충족한다.
⑤ O — 서로 다른 사람의 이득과 손실을 화폐액으로 합산하는 과정에는 1원의 사회적 가치를 사람마다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암묵적 가정이 들어간다.

오답 포인트

③은 '보상할 수 있음'과 '실제로 보상함'을 바꾸어 놓았다.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져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면 파레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상원칙 자체의 판정에는 실제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상원칙 문항에서는 먼저 실제 보상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보상 가능’이면 보상원칙이고, ‘실제 보상이 반드시 필요’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다. 칼도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를 보상하고도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상원칙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 가능성, 칼도 기준은 이득자가 손실자를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이다.

NoteBase

문 25.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이 아닌 것은?

① 볼록성
② 이행성
③ 비독재성
④ 파레토 원칙
⑤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가 전제하는 사회적 선호의 합리성과 사회적 선택규칙의 바람직한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는 개인들의 선호를 하나의 사회적 선호로 집계할 때, 비제한성·파레토 원칙·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비독재성과 같은 바람직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완전하고 이행적인 사회적 선호를 만드는 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정리이다.
볼록성은 재화 묶음에 대한 선호에서 평균적인 조합을 선호하는 성질로, 이 정리의 사회적 선택 조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볼록성은 소비자 선호나 선택집합의 형태를 설명하는 성질이지,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가 요구하는 사회적 선호체계의 바람직한 속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볼록성'이며, 올바르게는 개인 선호의 가능한 조합을 폭넓게 허용하는 '비제한성(보편성)'이 주요 조건에 포함된다.
② O — 이행성은 사회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한다면 A를 C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일관성 조건이다. 사회적 선호가 합리적인 순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③ O — 비독재성은 어느 한 개인의 선호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회적 선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④ O — 파레토 원칙은 모든 개인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존중 조건이다.
⑤ O —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은 A와 B 사이의 사회적 순위가 두 대안에 대한 개인들의 상대적 선호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하며, 제3의 대안 C에 대한 선호나 C의 추가·제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볼록성’도 경제학에서 바람직한 선호의 성질로 자주 제시되므로 애로우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볼록성은 소비자 선택이론의 선호 형태에 관한 조건이고, 애로우 정리의 핵심은 개인 선호를 사회적 순위로 집계하는 규칙의 조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사회적 선택의 공정성·일관성·집계 방식에 관한 조건인지 확인한다. 만장일치 존중, 비독재성, 제3대안으로부터의 독립, 완전성·이행성, 비제한성은 애로우 정리와 연결되고, 볼록성은 소비자 선호의 형태와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애로우는 ‘사회적 순위의 집계 조건’, 볼록성은 ‘소비자 선호의 모양’이다.

NoteBase

문 26.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frac{1}{2}Q$,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갑의 생산량)

①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②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③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④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⑤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에서 재산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협상을 통해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며, 재산권의 귀속은 협상에 필요한 보상액과 당사자별 후생을 바꾼다는 점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의 한계편익은 $MB=200-\frac{1}{2}Q$, 사적 한계비용은 $MC=50$,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MD=10$이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MC+MD=60$이다. 거래비용이 없어 효율적 협상이 가능하므로 최종 생산량은 재산권의 귀속과 무관하게 효율적 생산량으로 정해진다.

사용할 공식

효율적 생산량은 $MB=SMC$로 구한다. 갑의 생산자잉여는 $PS(Q)=\int_0^Q(MB-MC)dQ$이다. 갑이 재산권을 가지면 을의 최대 지불의사는 줄어든 피해액이고, 갑의 최소 요구액은 생산 감축으로 잃는 생산자잉여이다. 을이 재산권을 가지면 을의 최소 요구액은 허용된 생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다.

계산 과정

1. 협상이 없고 갑이 생산할 권리를 가지면 $200-\frac{1}{2}Q=50$에서 $Q=300$이다.
2. 효율적 생산량은 $200-\frac{1}{2}Q=50+10$에서 $Q^*=280$이다.
3. 갑이 생산할 권리를 가진 경우, 생산량을 300에서 280으로 줄일 때 갑이 잃는 생산자잉여는 $\int_{280}^{300}(150-\frac{1}{2}Q)dQ=100$이고, 을이 피하는 피해는 $10\times20=200$이다. 따라서 효율적 협상의 보상액 범위는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 $Q=280$에서 갑의 생산자잉여는 $\int_0^{280}(150-\frac{1}{2}Q)dQ=22{,}400$이다. 을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 200을 받으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400+200=22{,}600$이다.
5. 을이 재산권을 가진 경우 협상이 없으면 $Q=0$이다. 효율적 생산량 280을 허용할 때 을의 피해는 $10\times280=2{,}800$이므로 을은 적어도 2,800을 받아야 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갑이 재산권을 가진 상태에서 효율적 생산량 280으로 감축하려면 갑이 잃는 생산자잉여 100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80을 제공하면 타결될 수 있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100 이상 200 이하의 보상액에서 효율적 협상이 가능하다.
② X — 협상 전 생산량은 300이고 효율적 협상 후 생산량은 280이므로 생산량은 감소한다. '생산량은 증가한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20만큼 감소한다.
③ O — 효율적 생산량 280에서 갑의 생산자잉여는 22,400이고,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은 감소한 피해액 200이다. 따라서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④ X — 을이 재산권을 가지면 생산량 280으로 인해 을이 부담하는 피해 2,800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2,500을 제공하면 타결될 수 있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효율적 협상을 위해 적어도 2,800을 제공해야 한다.
⑤ X —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갑에게 생산할 권리가 없으므로 생산량은 0이다. '생산량은 300이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0이다.

오답 포인트

재산권의 귀속이 효율적 최종 생산량까지 바꾼다고 생각하기 쉽다. 코즈 정리의 조건에서는 최종 생산량은 280으로 같고, 협상 결렬 시 생산량과 보상 방향만 달라진다. 또한 ①은 갑의 손실 100, ④는 을의 피해 2,800이라는 서로 다른 최소 보상액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B = MC + MD$로 효율적 생산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각 재산권 배분에서 협상 결렬 시 생산량을 정하고, 효율적 생산량으로 이동할 때 권리자가 입는 손실을 최소 보상액, 상대방이 얻는 편익을 최대 지불의사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에서는 재산권이 효율적 생산량이 아니라 협상 결렬점과 소득분배를 바꾼다. 이 문항의 핵심 수치는 무협상 생산량 300 또는 0, 효율적 생산량 280, 갑의 감축손실 100, 을의 회피편익 200이다.

NoteBase

문 27.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 가치재들이 포함된다.

② 현물보조에 비하여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③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④ 현물보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현금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선택의 자유, 행정비용, 정책 목적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물보조는 교육·의료·주거처럼 용도가 정해진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정 가치재의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통제하기 쉽지만, 전달·관리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커질 수 있다.
현금보조는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달이 간단하여 행정비용이 낮고 선택의 자유가 넓지만, 지급된 현금의 사용처를 통제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무교육, 의료, 주거는 사회적으로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이며,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② X — 틀린 부분은 '현금보조는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이다. 일반적으로 현물보조는 재화·서비스를 직접 조달하고 배분하며 사용 여부까지 관리해야 하므로 현금보조보다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더 크다.
③ O — 같은 재정이 투입될 때 현금보조는 수급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여러 재화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제한된 현물보조보다 선택 범위가 넓다.
④ O — 현물보조는 정부가 교육·의료·주거 등 특정 재화의 소비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소비를 직접 유도하려는 온정주의적 목적에서 사용된다.
⑤ O — 현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실제 지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물보조보다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현금보조의 선별·심사에도 행정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이용한 함정이다. 그러나 현물보조에는 선별뿐 아니라 물품·서비스의 조달, 전달, 품질 관리까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비용 비교는 '현물보조의 행정·운영비용이 더 크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 방식의 장단점은 '선택의 자유와 전달비용' 및 '사용처 통제와 정책 목적 달성'의 두 축으로 판단한다. 현금보조는 선택의 자유가 크고 전달비용이 낮은 반면 사용처 통제가 어렵고, 현물보조는 선택의 자유가 작고 전달비용이 높은 반면 특정 재화의 소비를 보장하기 쉽다.

암기 포인트

현금은 선택·저비용, 현물은 통제·가치재이다.

NoteBase

문 28.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②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적이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⑤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규모수익체증으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이부가격제도의 효율성과 수지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므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큰 규모수익체증 구간에서는 요금수입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요금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는 방식이다. 기관의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경제적 이윤은 0이지만, 요금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공급량은 효율적 수준보다 적다.

이부가격제도는 이용량에 따른 사용료와 고정 가입료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맞추면서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계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요금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므로 소비자의 추가 편익과 생산의 추가 비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공급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이다.

② O — 규모수익체증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요금을 한계비용으로 정하면 단위당 수입이 평균비용보다 작아 총수입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관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다.

③ O —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요금이 평균비용과 같고, 평균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요금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므로 공급량이 한계비용 가격설정 때보다 줄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이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요금과 평균비용이 같아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다. 올바르게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지만 경제적 이윤도 창출하지 못한다'이다.

⑤ O — 이부가격제도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외에 고정요금을 부과한다. 이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여 한계비용 가격설정에서 생기는 기관의 손실을 줄이거나 보전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손실이 없다'를 '이윤을 창출한다'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수지균형을 달성할 뿐 양의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규모수익체증 하에서는 적자를 낸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모수익체증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관계에서 출발한다. 요금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효율적이지만 적자이고, 요금이 평균비용과 같으면 수지균형이지만 공급량이 과소하다. 사용료와 고정요금을 함께 제시하면 이부가격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 가격은 '효율·적자', 평균비용 가격은 '수지균형·비효율', 이부가격은 '사용료+고정요금'이다.

NoteBase

문 29.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들의 후생이 소득수준과 동일할 경우,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다.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로 소득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②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4이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한 뒤 앳킨슨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므로 평균소득은 250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소득이다.
롤즈 사회후생함수는 최저소득자의 후생을,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두 사람의 후생 합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용할 공식

앳킨슨 지수는 다음과 같다.
$A = 1 - \frac{y_e}{\bar{y}}$
여기서 y_e는 균등분배대등소득, $\bar{y}$는 평균소득이다. 이 공식은 실제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 있는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낸다.

계산 과정

1. 평균소득은 $\bar{y} = (400 + 100)/2 = 250$이다.
2. 롤즈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사회후생이 최저소득 100으로 결정된다. 균등분배에서도 같은 후생을 내려면 각자의 소득이 100이어야 하므로 $y_e = 100$이고, $A = 1 - 100/250 = 0.6$이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후생의 합이 $400 + 100 = 500$이다. 두 사람에게 250씩 균등분배해도 합계가 500으로 같으므로 $y_e = 250$이고, $A = 1 - 250/250 = 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롤즈 사회후생함수에서 앳킨슨 지수는 0이 아니라 0.6이다. 올바르게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6이다'이다.
② X — 0.4는 100/250, 즉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의 비율일 뿐이다. 앳킨슨 지수는 이를 1에서 빼므로 0.6이다. 올바르게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6이다'이다.
③ X — 롤즈 사회후생함수에서도 균등분배대등소득이 0이 아니라 100이므로 앳킨슨 지수는 1이 아니라 0.6이다. 올바르게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6이다'이다.
④ X — 공리주의에서는 소득의 합만 같으면 사회후생이 같으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 250과 같다. 따라서 앳킨슨 지수는 1이 아니라 0이다. 올바르게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앳킨슨 지수는 0이다'이다.
⑤ O —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현재 소득 합계와 250씩 균등분배했을 때의 소득 합계가 모두 500이다. 따라서 $y_e = \bar{y} = 250$이고 앳킨슨 지수는 0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0.4는 앳킨슨 지수 자체가 아니라 $y_e/\bar{y}$이다. 또한 롤즈는 최저소득, 공리주의는 소득 합계를 사회후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를 놓치면 ①·③·④에 이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평균소득을 구하고, 주어진 사회후생함수에서 실제 분배와 같은 후생을 만드는 균등소득 y_e를 찾은 다음 $A = 1 - y_e/\bar{y}$에 대입한다. 롤즈형에서는 최저소득을, 선형 공리주의형에서는 평균소득을 y_e로 본다.

암기 포인트

앳킨슨 지수는 '1−균등분배대등소득/평균소득'이다. 이 문항에서는 롤즈 0.6, 공리주의 0이다.

NoteBase

문 30.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단위비용은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3-\frac{1}{3}G_a$이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는 $4-\frac{1}{2}G_b$이다.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에 의해 적정공공재를 생산할 때,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단, G_a, G_b는 각각 갑과 을의 공공재 수요량이다.)

① 갑: 0.2 을: 0.8

② 갑: 0.4 을: 0.6

③ 갑: 0.5 을: 0.5

④ 갑: 0.6 을: 0.4

⑤ 갑: 0.8 을: 0.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린달균형에서는 두 사람의 공공재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 값이 공공재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에서 각자의 한계지불의사를 비용분담 비율로 정한다.

조건 정리

갑의 한계지불의사: $p_a = 3 - \frac{1}{3}G_a$
을의 한계지불의사: $p_b = 4 - \frac{1}{2}G_b$
공공재는 두 사람이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G_a = G_b = G$이다.
공공재의 단위비용이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1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1$이다.

사용할 공식

린달균형 조건은 $p_a + p_b = MC$이다. 공공재는 공동으로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개인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산량에서 각자의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다.

계산 과정

1. 같은 공공재 생산량 G에서 두 사람의 한계지불의사를 합한다.
$\left(3-\frac{1}{3}G\right)+\left(4-\frac{1}{2}G\right)=1$
2. 적정 공공재 생산량을 구한다.
$7-\frac{5}{6}G=1, \qquad G=\frac{36}{5}=7.2$
3. $G=7.2$를 각 수요함수에 대입한다.
$p_a = 3-\frac{1}{3}(7.2)=0.6$
$p_b = 4-\frac{1}{2}(7.2)=0.4$
따라서 갑과 을의 비용분담 비율은 각각 0.6과 0.4이다. 두 비율의 합도 단위비용 1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갑 0.2, 을 0.8'은 계산된 개인별 가격 0.6과 0.4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갑 0.6, 을 0.4이다.
② X — '갑 0.4, 을 0.6'은 두 사람의 분담 비율을 서로 바꾼 값이다. 올바르게는 갑 0.6, 을 0.4이다.
③ X — '갑 0.5, 을 0.5'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눈 값일 뿐, 각자의 한계지불의사에 따른 린달가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갑 0.6, 을 0.4이다.
④ O — 적정 생산량 $G = 7.2$에서 갑의 한계지불의사는 0.6, 을의 한계지불의사는 0.4이며 합계는 한계비용 1이다.
⑤ X — '갑 0.8, 을 0.2'는 각 수요함수에 $G = 7.2$를 대입한 값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갑 0.6, 을 0.4이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의 시장수요는 동일한 수량에서 개인별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다. 또한 비용을 단순히 균등 분담하거나 ②처럼 두 사람의 린달가격을 뒤바꾸면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갑의 수요곡선에 적정 생산량을 대입한 값이 0.6이고, 을의 값이 0.4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별 공공재 소비량을 하나의 G로 통일한 뒤, 개인별 한계지불의사의 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G를 구한다. 이어 그 G를 각 수요함수에 대입해 개인별 린달가격을 계산하고, 그 합이 한계비용과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요를 수직 합산하고, 린달균형에서는 개인별 가격의 합이 한계비용이 된다.

NoteBase

문 31.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A의 효용함수는 $U_A = 100 + 20D - D^2$이고 B의 효용함수는 $U_B = 20 + 12D - 2D^2$으로 주어져 있다. 연극공연의 한계비용이 $MC = 2D$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은 몇 회인가? (단, D는 연극공연 횟수이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구한다.

조건 정리

A의 효용함수는 $U_A = 100 + 20D - D^2$, B의 효용함수는 $U_B = 20 + 12D - 2D^2$이다.
연극공연은 두 사람이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이므로 각자의 한계편익을 더해야 한다.
효용함수의 상수항 100과 20은 D에 따른 한계편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MB_A + MB_B = MC$
각 개인의 한계편익은 효용함수를 공연 횟수 D로 미분하여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비경합적 공공재에서는 동일한 공연을 두 사람이 함께 소비하므로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의 한계편익은 $MB_A = \frac{dU_A}{dD} = 20 - 2D$이다.
2. B의 한계편익은 $MB_B = \frac{dU_B}{dD} = 12 - 4D$이다.
3. 사회적 한계편익은 $MB_A + MB_B = 32 - 6D$이다.
4. 이를 한계비용 $MC = 2D$와 같게 두면 다음과 같다.

$32 - 6D = 2D$

$8D = 32$

$D = 4$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공연 횟수는 4회이다.

선지 판단

① X — 1회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2 - 6(1) = 26$, 한계비용이 $2(1) = 2$이므로 공연을 더 늘리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틀린 표현 '1회'는 '4회'로 고쳐야 한다.

② X — 2회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2 - 6(2) = 20$, 한계비용이 $2(2) = 4$이므로 아직 최적점에 이르지 않았다. 틀린 표현 '2회'는 '4회'로 고쳐야 한다.

③ X — 3회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2 - 6(3) = 14$, 한계비용이 $2(3) = 6$이므로 한 회를 더 늘리는 편이 사회후생을 높인다. 틀린 표현 '3회'는 '4회'로 고쳐야 한다.

④ O — 4회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모두 8로 같아져 사회적 최적 조건을 충족한다.

⑤ X — 5회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2 - 6(5) = 2$, 한계비용이 $2(5) = 10$이므로 공연을 5회까지 늘리면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초과한다. 틀린 표현 '5회'는 '4회'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인데도 A와 B의 한계편익을 따로 비교하거나 한 사람의 한계편익만 한계비용과 같게 두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효용수준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효용함수를 미분한 한계편익을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경합적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 문제는 개인별 효용함수 미분 → 개인별 한계편익의 수직 합산 →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은 '한계편익의 합 = 한계비용', 즉 $\sum MB_i = MC$이다.

NoteBase

문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②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③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④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공투자의 편익과 비용을 실질적·화폐적, 유형적·무형적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할 대상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질적 편익·비용은 공공사업이 재화·서비스의 소비 가능성이나 실제 자원 사용을 변화시켜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화폐적 편익·비용은 상대가격 변화로 특정 집단에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는 분배상의 효과이며, 한 집단의 이득이 다른 집단의 손실과 상쇄되므로 사회 전체의 순편익으로 보지 않는다. 유형적 편익·비용은 시장가격 등을 이용해 화폐가치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고, 무형적 편익·비용은 시장가격이 없어 가치 측정이 어렵지만 사회후생에는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산출물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귀속되고 실제 소비 가능성을 늘리므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② O —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으로 생긴 상대가격 변화가 집단별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이다. 사회 전체로 합산하면 이득과 손실이 상쇄되므로 순사회후생은 변하지 않는다.
③ O — 공해·소음처럼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는 시장거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④ O — 유형적·무형적 구분은 편익의 크기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통한 측정 가능성에 따른다. 환경 개선이나 생명·안전 증진처럼 무형적 편익이 유형적 편익보다 큰 공공사업도 존재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도 사회후생을 변화시키므로 가능한 평가기법으로 화폐가치를 추정하거나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공공투자 시행 여부 판단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시장가격이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⑤는 측정이 어렵다는 무형성의 특징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자원과 사회후생이 변하는지로 실질적 효과와 화폐적 효과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시장가격을 이용한 측정이 쉬운지로 유형적 효과와 무형적 효과를 구분한다. 시장에서 직접 관찰되지 않더라도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면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적 효과는 사회후생 변화, 화폐적 효과는 상대가격에 따른 이전이다. 무형적 효과는 측정이 어려울 뿐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33.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반수제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ㄴ. 보다방식(Borda count)에서는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ㄷ.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점수투표제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ㄹ. 전략적 행동이 없다면 점수투표제가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ㅁ.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로 나타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과반수제, 보다방식, 점수투표제가 각각 집단선호의 순환,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선호 강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반수제: 대안을 둘씩 비교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개인의 선호가 합리적이어도 집단의 다수결 선호가 순환하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다방식: 각 유권자가 대안의 순위를 정하면 순위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대안의 추가·삭제에 따라 기존 대안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점수투표제: 각 대안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순위만 표시하는 서수적 방식과 달리 점수의 크기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수적 방식이다. 전략적 점수 부여가 없다면 선호 강도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ㄱ, ㄷ, ㄹ은 옳고 ㄴ, ㅁ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ㄴ의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는 표현은 '다른 대안의 추가·삭제가 기존 대안의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② O
ㄱ은 과반수제에서 집단선호가 순환할 수 있음을, ㄷ과 ㄹ은 점수투표제가 전략적 행동이 없을 때 점수로 선호 강도를 직접 반영함을 각각 옳게 설명한다.

③ X
ㄷ만 옳고 ㄴ과 ㅁ은 틀리며, 옳은 ㄱ과 ㄹ이 빠져 있다. ㄴ은 '보다방식에서는 대안의 추가·삭제가 기존 대안의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로, ㅁ은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기수로 나타낸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④ X
ㄹ만 옳고 ㄴ과 ㅁ은 틀리며, 옳은 ㄱ과 ㄷ이 빠져 있다. ㄴ은 '보다방식에서는 선택대상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로, ㅁ은 '점수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기수로 나타낸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⑤ X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ㅁ의 '서수'는 '기수'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보다방식이 순위만 이용한다는 사실을 '대안 간 독립성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점수투표제가 숫자를 사용하면서도 서수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보다방식은 대안 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점수투표제의 핵심은 점수 차이로 선호 강도를 나타내는 기수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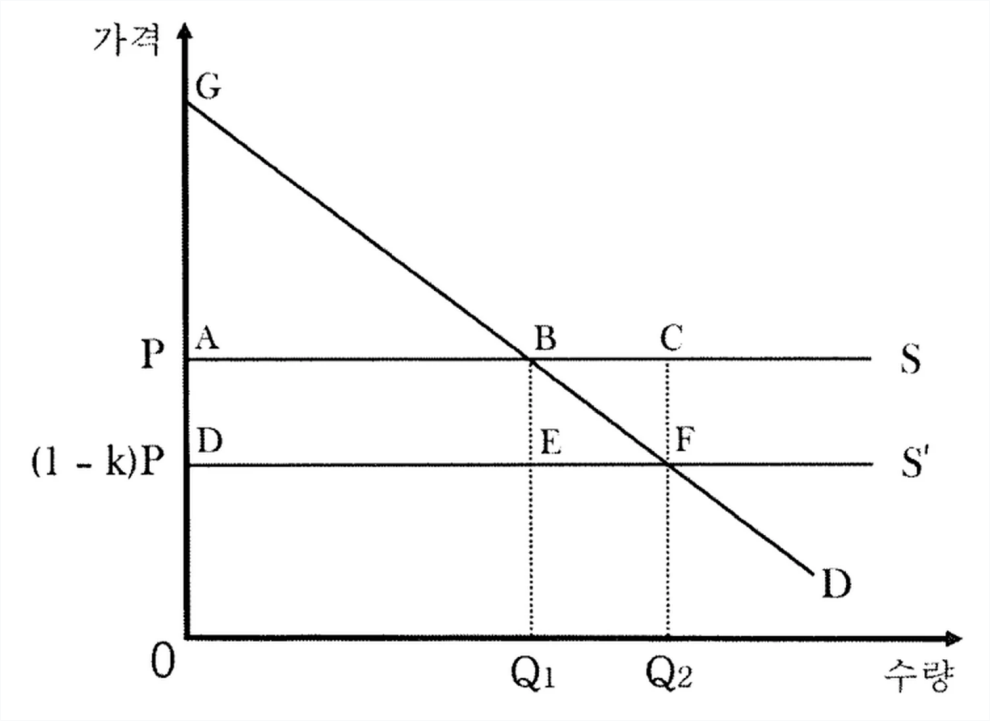
다수결에서 선호가 순환하면 투표의 역설, 순위별 점수를 합산하면 보다방식, 대안별 점수의 크기로 선호 강도를 표시하면 점수투표제로 판단한다. 점수투표제의 강도 반영은 전략적 행동이 없다는 조건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과반수제는 순환 가능, 보다방식은 대안 구성의 영향 가능, 점수투표제는 기수적 강도 표시이다.

NoteBase

문 34.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수평인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후의 공급곡선은 S'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가지는 초과부담은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① 초과부담은 0이다.

② 삼각형 BCF

③ 삼각형 BEF

④ 삼각형 GBA

⑤ 사각형 ABF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평인 공급곡선에서 단위당 보조금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거래량을 Q_1에서 Q_2로 늘릴 때, 정부의 보조금 지출 중 사회적 편익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초과부담임을 묻는 문제이다. 도식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추가 소비 구간 Q_1Q_2에서 공급가격과 수요곡선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 BCF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조금으로 소비량이 Q_1에서 Q_2로 증가하며, 이 추가 소비 구간에서는 공급에 드는 한계비용이 소비자의 한계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초과부담은 0이 아니다. 틀린 표현 '초과부담은 0이다'는 '초과부담은 삼각형 BCF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정부는 추가 소비량에도 단위당 보조금을 지출하지만, Q_1 이후에는 수요곡선이 공급가격 P보다 아래에 있다.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차이를 Q_1부터 Q_2까지 합한 영역이 삼각형 BCF이므로 초과부담에 해당한다.

③ X
삼각형 BEF는 가격 하락으로 새로 소비된 Q_1Q_2 구간에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잉여 증가분이다. 이는 보조금 지출 중 편익으로 회수되는 부분이며 초과부담이 아니다. 틀린 표현 '삼각형 BEF'는 '삼각형 BCF'로 고쳐야 한다.

④ X
삼각형 GBA는 보조금 지급 전 균형 Q_1에서 존재하던 소비자잉여이다. 보조금 때문에 새로 발생한 순손실이 아니므로 초과부담이 아니다. 틀린 표현 '삼각형 GBA'는 '삼각형 BCF'로 고쳐야 한다.

⑤ X
사각형 ABFD는 보조금으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가한 전체 소비자잉여이다. 기존 소비량에 대한 이득과 새로 소비된 수량의 이득을 합한 영역이지 사회적 순손실이 아니다. 틀린 표현 '사각형 ABFD'는 '삼각형 BCF'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조금으로 커진 소비자잉여와 사회 전체의 순후생 변화를 혼동하기 쉽다. 사각형 ABFD는 소비자잉여 증가분이지만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 지출을 함께 차감하면 삼각형 BCF만큼 순후생이 감소한다. 특히 삼각형 BEF는 추가 소비의 편익이고, 같은 구간의 보조금 지출 가운데 그 편익을 초과하는 부분이 삼각형 BCF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도식에서는 먼저 보조금 전후 거래량을 확인한다. 그다음 보조금 때문에 추가된 거래 구간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을 찾으면 초과부담이 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의 초과부담은 과다 소비된 수량 구간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이다. 이 문항에서는 Q_1부터 Q_2까지의 삼각형 BCF이다.

NoteBase

문 35.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 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10원이다.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겨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면 갑과 을의 이득은 각각 0원이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은 11원, 합의를 지킨 사람의 이득은 -1원이다. 이러한 게임적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생될 결과는?

①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②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

③ 두 사람의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④ 갑은 반드시 합의를 지키지만 을은 합의를 어긴다.

⑤ 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기지만 을은 합의를 지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과태료를 반영한 순이득을 비교하여 각 사람의 우월전략과 게임의 균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합의를 어긴 사람에게만 2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면 자신의 이득은 합의 준수 시 10원, 위반 시 11원-2원=9원이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면 자신의 이득은 합의 준수 시 -1원, 위반 시 0원-2원=-2원이다.

핵심 개념

엄격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행동보다 더 큰 이득을 주는 전략이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선택과 관계없이 합의를 지키는 편이 더 큰 이득을 주므로, 합의 준수가 갑과 을 모두의 엄격우월전략이다.

적용 기준

상대방의 행동을 하나씩 고정한 뒤 자신의 두 행동에서 얻는 순이득을 비교한다. 상대방이 합의를 지킬 때에는 10원>9원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어길 때에는 -1원>-2원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합의 준수를 선택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키는 조합이 우월전략균형이자 내시균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갑과 을 모두에게 합의 준수가 엄격우월전략이므로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② X —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어긴다'가 틀렸다. 서로 위반하더라도 각자는 위반 시 -2원보다 준수 시 -1원을 얻으므로, 올바르게는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킨다.
③ X — '합의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가 틀렸다. 상대방의 선택과 관계없이 준수의 순이득이 더 크므로, 올바르게는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지키는 결과가 확정된다.
④ X — '을은 합의를 어긴다'가 틀렸다. 을도 갑과 동일한 보수 구조를 가지므로 합의 준수가 엄격우월전략이며, 올바르게는 갑과 을 모두 합의를 지킨다.
⑤ X — '갑은 반드시 합의를 어긴다'가 틀렸다. 갑에게도 합의 준수가 엄격우월전략이며, 올바르게는 갑과 을 모두 합의를 지킨다.

오답 포인트

과태료 부과 전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지킬 때 위반 이득 11원이 준수 이득 10원보다 크지만, 과태료 2원을 빼면 위반의 순이득은 9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쌍방 위반 때에도 위반자는 0원이 아니라 과태료를 반영한 -2원을 얻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재가 있는 게임에서는 먼저 벌금·과태료를 각 행동의 보수에서 차감한 뒤, 상대방의 각 선택에 대해 자신의 보수를 행별로 비교한다. 한 행동이 모든 경우에 더 유리하면 그것이 엄격우월전략이고, 양쪽의 엄격우월전략이 만나는 조합이 균형이 된다.

암기 포인트

과태료 반영 후 준수 보수는 10원과 -1원, 위반 보수는 9원과 -2원이므로 준수가 항상 우월하다.

NoteBase

문 36. 정부 지출증대를 위한 공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②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화폐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

③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④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고 한다.

⑤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을 공채로 조달할 때 중앙은행 인수와 시중 소화가 통화량, 이자율, 민간투자 및 유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앙은행 인수는 중앙은행이 공채를 매입하면서 본원통화와 화폐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유효수요 확대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중 소화는 민간이 보유한 자금으로 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자금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러너효과는 공채가 민간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공채 잔액이 늘어날수록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자산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이다. 중앙은행이 공채를 전액 인수하면 화폐공급이 증가하므로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화폐공급량이 감소'와 '유효수요 증대효과는 없다'이다. 중앙은행의 공채 인수는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며, 정부지출 증가와 결합해 유효수요를 확대한다.
③ O — 공채가 시중에서 소화되면 정부의 자금수요가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민간의 소비지출이 감소'이다. 러너효과에서는 공채가 민간의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공채 잔액 증가가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크다'이다. 시중 소화는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위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상승 억제가 수반되는 중앙은행 인수보다 유효수요 증대효과가 작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앙은행의 공채 인수를 긴축으로 착각하거나, 시중 소화도 정부지출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구축효과를 무시하기 쉽다. 또한 ④는 러너효과의 소비 방향을 '증가'에서 '감소'로 뒤집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채 인수 주체부터 확인한다. 중앙은행 인수이면 화폐공급 증가와 유효수요 확대를, 시중 소화이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구축을 연결한다. 공채의 자산효과를 묻는 러너효과는 소비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앙은행 인수는 통화 확대, 시중 소화는 이자율 상승·투자 구축, 러너효과는 공채 자산 증가·소비 증가이다.

NoteBase

문 37. 지방 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②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③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④ 조세행정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이후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조세행정과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편익과 한계를 구분하고, 지역 간 외부성이 있을 때 분권적 의사결정이 효율성을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방분권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별 선호와 여건에 맞추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지역 선택, 정책의 다양성과 실험, 주민 수요에 대한 대응성은 분권의 편익이다. 반면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 편익이나 비용을 미치는 지역 간 외부성이 존재하면 각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분권적 공급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역마다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조합이 다르고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호 충족도가 높아져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이동과 지역 선택을 통한 분권의 편익이다.
② O — 지방정부는 지역의 선호와 여건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실험도 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외부성이 있는 경우 분권화는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이다.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 개별 지방정부는 지역 밖의 편익이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므로 과소공급이나 과다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지역 간 외부성이 있는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 지방정부 간 협력 또는 보조금과 같은 외부성의 내부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④ O — 조세의 부과·징수에는 전산망, 인력, 자료관리 등 고정비용이 들어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이 세금을 징수한 뒤 지방에 이전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⑤ O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므로 재선을 포함한 정치적 책임을 지며 주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분권이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한다는 일반적 장점을 지역 간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함정이다. 외부효과가 해당 지역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정보 우위만으로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과가 한 지역 안에 머물고 지역별 선호가 다르면 분권의 편익이 크다.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외부성의 내부화가 필요하므로 중앙의 조정이나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역 맞춤·정책 실험·주민 대응은 분권의 장점, 지역 간 파급효과는 분권의 한계이다.

NoteBase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을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세지출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의 목적과 강조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입을 조세지출로 파악하여 예산과 함께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 기능·사업·활동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연결하여 예산의 능률적 집행과 관리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 장기 목표와 사업 대안을 분석하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영기준예산제도: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등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을 드러내고 심사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② O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업무량과 원가를 결합하여 예산 집행의 능률성과 관리 기능을 강조한다.
③ O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장기 계획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사업 대안을 비교하여 예산에 반영하므로 계획 기능을 강조한다.
④ O —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므로 점증주의를 완화하고 합리적 자원배분을 높일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한다'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을 기능·사업·활동별로 편성하고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연결하는 제도이다. 지출 항목별 통제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성과주의예산의 '관리' 기능을 단순한 부서별 편성과 혼동하게 만든다. 성과주의예산의 관리 기능은 조직 구분 자체가 아니라 사업별 성과와 투입 비용의 연결에서 나타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도의 대표 키워드로 판단한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 감면의 통제,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량·단위원가와 관리, 프로그램예산은 장기 계획과 대안 분석, 영기준예산은 원점 재검토와 우선순위이다.

암기 포인트

조세지출은 감면 통제, 성과주의는 관리, 프로그램예산은 계획, 영기준은 원점 재검토이다.

NoteBase

문 39.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② 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③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정점(단봉형)인 경우 성립한다.

④ 중위투표자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⑤ 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중위투표자정리가 다수결의 정치적 균형과 정당의 정책 선택에 주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당 간 정책 차별화가 아니라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향한 정책 수렴이다.

핵심 개념

중위투표자정리: 정책 대안이 일차원적으로 배열되고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선호의 정점이 중앙에 놓인 중위투표자의 최선 대안이 다수결에서 정치적 균형이 된다는 정리이다.
정당 경쟁에 적용하면 양당은 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 쪽으로 이동하므로 정책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중위투표자는 선호의 정점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여, 자신보다 양쪽에 같은 수의 투표자가 놓이는 투표자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이다. 실제로는 정당들이 중위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현상과 관련된다.
③ O —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다른 대안과의 쌍대 다수결에서 이기는 정치적 균형이 될 수 있다. 이는 중위투표자정리의 핵심 성립 조건이다.
④ O — 중위투표자정리는 다수결에서 어떤 대안이 승리하는지를 설명할 뿐, 그 대안이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에서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치적 균형과 파레토 효율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⑤ O — 정당은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그가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정당 정책의 수렴을 설명하는 대표적 함의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차별적인 정책'이 함정이다. 중위투표자정리의 정당 경쟁 결과는 정책 차별화가 아니라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향한 정책 수렴이다. 또한 ④처럼 다수결의 승리 여부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호가 단봉형인지 확인한 뒤 선호의 중앙에 있는 투표자를 찾는다. 다수결 균형은 중위투표자의 최선 대안이고, 정당 경쟁의 방향은 그 대안으로의 수렴이라고 판단한다. 다수결 균형이 곧 파레토 효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단봉형 선호 → 중위투표자 대안이 다수결 균형 → 정당 정책은 중앙으로 수렴한다.

NoteBase

문 40.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frac{\triangle T}{\triangle Y} \cdot \frac{Y}{T}$ = 1.2 이고, 조세부담률은 $\frac{T}{Y}$ = 0.25 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G= △T라고 할 때, 정부지출승수 값은? (단, T: 조세수입,Y: 국민소득, G: 정부지출)

① $\frac{3}{10}$

② 1

③ $\frac{5}{2}$

④ $\frac{10}{3}$

⑤ $\frac{24}{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조세부담률로 한계조세율을 구한 뒤, $\Delta G = \Delta T$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승수 $\Delta Y/\Delta G$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세수의 소득탄력성은 1.2, 조세부담률 T/Y는 0.25이다.
구해야 할 값: 정부지출승수 $\Delta Y/\Delta G$이다.
주의할 조건: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수입 증가액이 같으므로 $\Delta G = \Delta T$이다.

사용할 공식

세수의 소득탄력성은
$\varepsilon_{T,Y} = \frac{\Delta T}{\Delta Y} \cdot \frac{Y}{T}$
이다. 따라서 한계조세율은
$\frac{\Delta T}{\Delta Y} = \varepsilon_{T,Y} \cdot \frac{T}{Y}$
로 구한다. 또한 $\Delta G = \Delta T$이므로 정부지출승수는 $\Delta Y/\Delta G = \Delta Y/\Delta T$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한계조세율을 계산하면
$\frac{\Delta T}{\Delta Y} = 1.2 \times 0.25 = 0.3 = \frac{3}{10}$
이다.

2. 따라서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Delta G = \Delta T = 0.3\Delta Y$
의 관계를 갖는다.

3. 정부지출승수는
$\frac{\Delta Y}{\Delta G} = \frac{1}{0.3} = \frac{10}{3}$
이다.

선지 판단

① X — 3/10은 계산된 한계조세율 $\Delta T/\Delta Y$이지 정부지출승수가 아니다. '정부지출승수는 3/10이다'라는 값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그 역수인 10/3이다.
② X — 정부지출승수가 1이라는 값은 $\Delta G = 0.3\Delta Y$라는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 올바른 값은 10/3이다.
③ X — 정부지출승수가 5/2라는 값은 한계조세율 0.3의 역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값은 10/3이다.
④ O — $\Delta G = 0.3\Delta Y$이므로 $\Delta Y/\Delta G = 1/0.3 = 10/3$이다.
⑤ X — 24/5는 1.2를 0.25로 나눈 값으로, 탄력성 식에서 조세부담률을 잘못 나누면 나오는 값이다.
한계조세율은 두 값을 곱한 0.3이고, 올바른 정부지출승수는 10/3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3/10은 정부지출승수가 아니라 한계조세율이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한계조세율을 구한 뒤 역수를 취하지 않거나, 탄력성 식을 변형할 때 T/Y를 곱하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탄력성 × 평균조세율'로 한계조세율 $\Delta T/\Delta Y$을 구한다. 그다음 $\Delta G = \Delta T$이면 정부지출승수 $\Delta Y/\Delta G$는 한계조세율의 역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수탄력성 × 조세부담률 = 한계조세율, $\Delta G = \Delta T$일 때 정부지출승수 = 한계조세율의 역수이다.

NoteBase